

2. 정책 동향

□ 정책 이슈 : 산업정책 우선순위 논쟁

- (논쟁 내용) 지식집약적인 新산업 육성을 산업정책의 중점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,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의 주력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
- (新産業 育成論) 기존의 주력 산업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첨단 新산업 육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
 - 장기적인 관점에서 新산업 육성은 특정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력 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임
 - 정보통신, 신소재 등의 新산업 분야가 그 대표적인 사례임
 - 新산업 육성 정책은 지식이 원활히 창출·확산·활용되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고 경제제도를 개혁하여 우리 산업을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이행시키기 위한 것임
- (既存의 主力産業 優先論) 한국경제의 현실을 볼 때, 위험이 높은 미래형 新산업 분야보다는 기존의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
 - 新산업 분야일수록 국가적인 기반 여건이 구비되어야 발전 가능한 것으로, 이것은 정책적인 개별 산업의 육성이 아니라 국가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임
 - 유럽의 패션 산업은 예술적 유산과 관련이 있으며, 미국의 정보통신은 냉전 기간에 축적된 군사기술과 관련이 있음
 - 더우기 경기 불황과 축소지향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新산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
 - 따라서 新산업 육성은 기업들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후 기업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며, 지금은 지식 집약화 과정을 통해 자동차, 조선, 반도체 등 기존의 주력 산업을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임

(정 반 석 bsjoun@hri.co.kr ☎724-4045)

□ 정부 정책 동향 (12. 14~12. 20)

<p>정보통신부(12.14): 한국통신 연내 직상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 지분 71.2%를 제외한 28.8%인 8,292만 주가 대상이며, 총 2조 4,000억 원에 이를 전망 - 99년 1/4분기에 해외주식예탁증서(DR)를 발행하고, 외국 통신업체에 대한 지분 매각도 추진
<p>재정경제부(12.14): 관세법 개정안 발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 투자지역,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등은 종합보세 구역으로 지정하여 통관없이 수입품 사용 가능 - 시설재, 원자재 등을 간단한 반출 신고로 사용한 후 나중에 수입 신고하는 '즉시반출제도' 도입
<p>공정거래위원회(12.15):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재검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업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고, 30대 그룹중 절반이 해체된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음 -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해소되는 2000년 이후에 지정제도의 폐지 혹은 5대 그룹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
<p>건설교통부(12.16): 광역권 개발계획안 마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반도 서남부 지역을 對중국 교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20조 1,000억 원 투입 - 국토 중심부의 대전·청주권은 자족 경제권으로 육성
<p>공정거래위원회(12.16): 부당내부거래 조사 지침 마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, 불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마련하여 99년 조사부터 활용
<p>재정경제부(12.17): 정부, 출자은행 경영 개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4% 이상 출자한 은행(지방은행은 15% 이상)에 대해 비상임이사 선임, 은행장후보 추천위원회 참여 등의 방식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방침
<p>중소기업청(12.17):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9년에 국민, 기업, 신한, 한미 등 4개 은행은 총 20조 700억 원을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 - 비상장 중소기업에만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기금을 99년에 100억 원, 3년 내에 500억 원 규모로 운영
<p>금융감독위원회(12.18): 6대 이하 그룹 계열사 정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9년 상반기까지 6대 이하 및 중견 대기업 계열사 467개중 307개가 합병, 매각, 청산 등으로 정리 - 기업개선 방안이 확정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기구(CRV)를 설치하여 구조조정을 수행
<p>금융감독위원회(12.20): PCS 등 추가 빅딜 방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철강, 석유화학 이외에 개인휴대통신(PCS), 케이블 TV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대규모 사업 교환 시사 - 삼성과 대우의 빅딜에 금융 지원 가능성과, 제일 및 서울은행의 소액 지분은 시장 가격 이하의 소각 불가피

(곽 용 선 yskwak@hri.co.kr ☎724-4058)